

여성정치세력화와 여성대통령 만들기

-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독교 여성윤리학적 비평 -

이숙진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 I. 여성대통령의 탄생과 여성인권
- II. 박근혜 지지논쟁과 여성정치세력화(18대 대선 이전)
- III. 박근혜 여성대표성논쟁과 여성정치세력화(18대 대선과정)
 - 1. 보수정당의 박근혜 여성대통령 만들기
 - 2. 진보적 남성진영의 박근혜 여성대통령 만들기
 - 3. 진보여성진영의 박근혜대통령 만들기
- IV. 박근혜정부와 여성정치세력화
- V. 여성정치세력화와 기독교 여성윤리학의 과제

• ABSTRACT •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and Making of Female
President in Korea: Park Geun-hye regime Critically Viewed by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Feminist Ethics

Lee, Sook-Jin

Park Geun-hye, before the 18th president election of Korea, was a veteran politician who got various names such as “star politician,” “a queen of election,” “the only one candidate for President.” Female elites seeking for feminist politics were not assured that she could be a stepping stone or an obstacle for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in Korea. Park Geun-hye has two images, “a daughter of Park Jung-hee, the late former President” and “a supporter of Yushin regime as dictatorship.” While the first helped her entering politics in the general election of 1998, the second seemed to become a leg iron for her presidential candidate in 2012. Surprisingly she, however, succeeded in becoming a president. Who supported Park, naming her as a representative of women? This question is related to the controversy among women elites over support for Park as an female politician in the past ten years. In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feminist ethics, this paper tried to contribute to the task of making gender-equality society through the creative conflicts between Park regime and progressive feminist camp.

Key words: Park Geun-hye regime, the 18th president election of Korea,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Christian Feminist ethics

I. 여성대통령의 탄생과 여성인권

여성인권을 가늠할 수 있는 성별격차지수 순위 135개국 중 108위, OECD 국가중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 최하위¹⁾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사회가 '여성'대통령을 배출할 정도로 여권이 향상되었다고 보면서 역할모델론을 내세워 여성의 삶의 질이 더욱 고양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고 권력자 1인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삶이 고양될 것이라는 믿음은 여권확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후자의 입장에 의하면 여성과소대표나 여성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최고지도자의 등장은 양성평등의 조건이 갖춰진 듯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여성대중에게 자괴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대통령의 등장으로 마침내 한국 사회는 성평등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성평등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정부는 여성 친화적 정부가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일차적 원인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성 주류화 전략'으로 인해 가시적 차원의 차별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유리천장과 유리절벽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데 있다. 직종에서의 성별분리와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획기적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서는, 여성 대통령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성차별

1) 2013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OECD 국가들의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를 보면 한국은 26개 국가 중 꼴찌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여성의 고학력(대학 이상) 비율(23%),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23%), 여남의 임금 격차(23%), 여성의 고위직 비율(23%), 평균 임금에서 보육 비용(8%)를 분석해 지수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3/03/daily-chart-3>

적 구조를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새로 선출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18대 대선 이전의 박근혜는 ‘스타 정치인’, ‘선거의 여왕’, ‘독보적인 대통령 후보’라는 타이틀을 교체해 온 노련한 정치인이다. 여성정치를 기획하는 여성들에게 그는 여성정치세력화의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를 의문거리였다. 설령 디딤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와 연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성진영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의 과거사 이력 때문이다. 박근혜에게 ‘박정희의 딸’ 혹은 ‘유신의 조력자’라는 표상은 그의 정치 입문(1998)을 도운 ‘날개’였지만, 대선(2012)에 도전하는 그에게는 절대 풀릴 것 같지 않은 ‘ 족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족쇄에서 빠져나와 그는 ‘여성’대통령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누가 그에게 여성대표성의 날개를 달아주었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여성대통령 시대의 여성정치세력화의 방향성과 이에 대한 기독교 여성윤리의 정당성을 모색한다.

II. 박근혜 지지논쟁과 여성정치세력화(18대 대선 이전)

여성정치를 기획하는 여성들이 정치인 박근혜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부터이다. 당시 박근혜는 스타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정계에 입문한 지 2년도 안되어 한나라당 부총재로 선출(2000년)되고,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정도로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경선 과정에서 그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과 갈등을 일으켰고, 우여곡절 끝에 탈당 후 한국미래연합을 창당(2002.4)하였다.

그 즈음 진보적 언론인으로 알려진 <프리미어> 편집장 최보은 기자는 박근혜를 주목하였다. “박근혜를 사유하자” “여성이 뭉쳐 박근혜를 찍는 게 진보다”고 선언하면서 이른바 박근혜 지지론을 주창하였다.²⁾ 대국민적으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남성마초들’의 정치판에서는 구색 맞추기용의 여성정치인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어느덧 “건국 이래 최초로 정치권 전체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기반을 가진”³⁾ 그에게서 한국 여성 정치인의 현실과 미래를 본 것 같다.

동기가 어찌되었든 그의 주장을 견지하는 여성들이 잇달았다. 여성문화모임인 <살류쥬> 대표의 “최보은을 지지한다”는 발언,⁴⁾ “정치하고 싶으면 어떤 정당이든 가라”는 이효재(이대명예교수)의 발언, 김선주(한겨레신문 주필)의 “박근혜 의원이 여성대통령 후보가 못될 것이 없다... 지나친 결벽주의를 버리고 서로 연대하고 지지분해 질 각오를...(그렇지 않는다면) 남성 정치권력에 이용당하는 주변 정치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⁵⁾이라는 요지의 지지 발언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치활동을 하려는 여성이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유용한 자원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박근혜 지지론은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최보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소신발언이었다. 당시 박근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박정희 향수’로 인해 거품인기를 누릴 뿐인 ‘독재자의 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로부터 “주류 페미니즘이 저급한 사회의식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억압에 무관심하다”⁶⁾고 매도당했다.

2) 편집부, 「최보은 인터뷰-박근혜가 출마하면 나는 그를 찍겠다, 월간 말, 『말』, 2002. 4.

3) 최보은, 「박근혜 인터뷰-진흙탕 정치판 헤쳐 나갈 지혜와 신념있다, 월간 말, 『말』 2003. 4.

4) 위의 글.

5) 김선주, ‘여성도 더러워져야, 한겨레신문, 2002년 4월 25일자. 4면.

6) 김규향, ‘그 페미니즘, 씨네 21, 2002년 4월 25일자

박근혜 불가론의 입장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조순경(이대)은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독재자 아버지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⁷⁾ 그 외에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것과 민주주의의 실현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성 정체성보다도 유신체제의 흔적이 더 강하게 각인된 박근혜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등이 잇달았다.

이에 반해 진보적 여성운동진영(이하 여성진영)에서는 ‘냉정한 침묵’을 지켰다. 당시 여성진영은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더러운 판을 갈아엎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⁸⁾ 구체적으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할당제 추진과 왜곡된 선거문화개혁에 힘을 싣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⁹⁾ 자신의 발언을 계기로 여성과 정치, 여성과 선거 등에 대한 정교한 논의전개를 기대했던 최보은은 여성진영의 무반응으로 인해 후속 담론화 작업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1차 박근혜 지지논쟁은 일단락되었다.

박근혜 지지론의 파동이 잦아질 무렵, 5%대에 머물던 여성의원의 수가 17대 총선에서는 13%로(여성의원 39명)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순전히 비례대표제에 의한 여성할당제 덕분이었다. 여성할당제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기울인 노력의 열매이다. 322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총선여성연대는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의 도입과 유권자운동 수칙, 나아가 여성 후보를 돕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미국의 <에밀리 리스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7) 조순경,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용기’를 어디서 얻었을까?’, 여성신문, 675호, 2002년 5월 10일자.

8) 이정민, 「박근혜 논쟁은 그들만의 논쟁이었나」. 월간 말, 『말』 2003. 8.

9)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강남식, 정현백 대담-페미니즘 아젠다는 우리의 미래인가」,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 기획대담』, 2004. 5.10 미간행자료.

101명의 공천추천 여성명단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대표로서 자격있는 인력풀을 제공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영페미니스트들로부터 정치적 비전이나 보수/진보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기만 해도 단결한다고 폄하된 적도 있지만,¹⁰⁾ 여성정치세력화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여성진영이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팔목할만한 전략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박근혜는 정치공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한나라당으로부터 탈당, 창당, 복당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다진 결과이다. 그는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부패의 이미지를 탈색시키는데 주력하여 퇴출대상의 정당을 소생시켰는데, 이를 계기로 아버지의 후광에 스스로의 능력을 더하여 '구원자'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으로서는 최대위기였던 '탄핵 역풍'(2004) 속에 치른 17대 총선에서 무려 121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인 박근혜의 위상은 더욱 단단해졌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지지론이 또 다시 여성진영에서 등장하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압축적 고도성장 시대의 경제 아이콘이었던 이명박 서울시장을 대선후보로 밀자 보수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협의회와 여성정치연맹 등 대표 50명은 박후보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하였다. 퇴출 직전의 당을 구원한 그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선에서 평가절하 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에 빚대어, 박 후보야말로 일찍이 청와대에서 경제도약 수업을 받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임을 내세웠다.

이처럼 박근혜는 선거 국면마다 여성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호출되어 온 여성정치인이다.

10) 조이여울, 「여성정치, 이미지만 있다」,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38호, 2003, 210.

III. 박근혜 여성대표성논쟁과 여성정치세력화(18대 대선과정)

박근혜는 두 차례(2002, 2007)에 걸쳐 당내 경선에서 실패했지만 18대 대선에서는 일찍부터 여당의 독보적 대선후보로 거론되었다.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새 정치의 희망이었던 안철수 후보를 시종 압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치입문을 열어준 ‘박정희의 딸’이라는 기표는 대통령직을 앞둔 상황에서는 과거사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족쇄가 되었다. 그런데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사용한 슬로건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준비된 여성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어느 틈엔가 과거사의 족쇄로부터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누가 그 족쇄를 풀어주었을까?

이 장에서는 ‘준비된 여성대통령’ 슬로건과 박근혜의 여성기호를 둘러싼 성(sex/gender)논쟁을 조망하면서 정권획득을 욕망하는 남성들과 여성정치를 기획하는 여성엘리트들은 박근혜의 여성기표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담론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여성정치 담론의 공간에 미친 효과는 무엇인지, 박근혜 표상이 담론화되는 과정과 그녀의 족쇄가 풀리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대선 기간 중 박근혜는 ‘여성’이란 기호를 매우 자주 사용하였다. 가령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 건국 이후 가장 큰 변화이자 쇄신¹¹⁾이며, “여성 리더십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금은 어머니와 같은 희생과 강한 여성리더십이 필요한 때¹²⁾이고, “여성 대통령 시대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하였다. 심지어 그가 추진하는 복지와 통합 정책의 핵심을 “열 자식 안 굶기려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여성과의 친화성을 적극적으로

11) 김정민, ‘박근혜, 여성대통령 탄생, 건국이후 가장 큰 변화이자 쇄신’, 이데일리, 2012년 10월18일자.

12) 새누리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출범식 자료.

부각시켰다.

언제부터 이러한 여성관이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18대 대선 이전의 그의 삶의 행보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나 여성주의에 크게 동조한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여성주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적 가부장 국가의 대리인’에 가까웠다. 유신 시절 그가 행한 연설을 모은 『새마음의 길』을 보면 조국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국가가부장제를 역설하는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¹³⁾ 그에게 어린 버스안내양과 공단의 여공은 국가가부장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존재였고 시혜의 대상일 따름이었다. 그들을 여성으로 대했다는 흔적은 이 책 어디에도 없다. 여성이론가 임옥희에 의하면 이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화되고 있다.¹⁴⁾

자신이 당대표로 있던 18대 총선 당시 공천한 여성은 18명에 불과했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9대 총선 공천을 지휘했을 때에도 16명밖에 공천하지 않았으며 지역구 여성 공천자는 7%에 불과했다. 그리고 대선 슬로건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지만 정작 대선후보초청 여성계토론회는 무산시킨 주역이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여성대표성라는 기호를 선취하고 전유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우리사회에서 정치인의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은 거의 모두가 공감한다.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인기가 급락하면 내각이 비정치인들로 개편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비정치인의 입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정치인이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데 정치와 여성이 연결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 효과를 기대한 탓이었을까? 정치쇄신을

13) 박근혜, 『새마음의 길』(서울: 구국여성봉사단, 1979).

14) 임옥희, 『새마음의 길』: 유령의 귀환과 복화술 사회, 문화미래 이프, 2013년. 1월 22일자.

내세운 19대 총선 당시 3당 대표는 모두 여성 즉 박근혜(새누리당), 한명숙(민주통합당), 이정희(통진당)였다.

여성정치인의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는 선거과정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였다.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를 밝힌 한 남성유권자는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지만 박근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게다가 여자니까 조직이나 옛 관계에 끌려 다니는 남자들보다 자기 소신을 잘 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¹⁵⁾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반대 진영에서는 그녀가 과연 ‘여성’이라는 기표를 전유할 자격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었다.¹⁶⁾

박근혜 자신이 여성의식을 갖고 있건 없건,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경험이 있건 없건, 18대 대선국면의 ‘박근혜’는 풍부한 의미를 품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자 표상이며 신화였다. 따라서 ‘여성대표’라는 기표를 전유한 ‘박근혜’를 둘러싼 담론이 활성화되었고,¹⁷⁾ 여성정치의 담론공간도 마련되었다. 담론들은 서로 충돌하고 때론 착종되면서 그의 실체와 별개로 ‘여성대통령 만들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1. 보수정당의 박근혜 여성대통령 만들기

박근혜 ‘여성대통령’ 만들기는 그를 지지하는 보수 남성정치인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 당시 막강한 후보인 박근혜와 여성대통령 시기상조론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여성들은 무조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이른바 ‘역사적 사명론’을 주창하였다.¹⁸⁾ 그러자 당시 이재오는 분단현실을 언급하면서 국방을 경험하지 않

15) 이지은, ‘둘 다 가난했다 선택이 달랐다’, 한겨레21, 제945호, 2013년 1월 21일자.

16) 이지은, ‘그레이스 언니, 언니 맞아요?’, 한겨레21, 제934호, 2012년 11월 5일자.

17) 끝까지 완주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후보였던 여성정치인은 이정희, 심상정, 김순자, 김소연 (호칭생략)이 있으나 그 누구도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은 여성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른바 ‘여성대통령 시기 상조론’을 내세웠다. 두 입장이 대립했지만 시기상조론은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구식논리라는 집중공격을 받았고 결국 당론은 박근혜대세론 곧 여성대통령론으로 통합되어 갔다.

여성 국무총리, 여성 당대표, 여성 대법관에 이어 여성 대통령이 등장할 시기가 되었다는 논리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새정치 기획이라는 프레임으로 박근혜를 전폭 지지하였다. 예를들면 “여성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정치의 최고의 쇄신이고, 남성 중심의 기존 체제에 새로운 변화와 바람을 몰고 올 사회적 혁명이다”(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라는 보수주의자에게서 결코 들을 수 없는 생경한 표현이 등장하였다. 새 세상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이러한 과격적인 선언이 혁명적인 효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여성대통령론을 지지하는 보수적 유권자들과 새누리 당원들이 ‘박근혜’가 아닌 다른 여성정치인에게도 같은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고, 여성의 삶의 조건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줄 여성정책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아름다운 말이나 공허한 여성대통령론 및 정치쇄신론에서 우리는 보수남성 집단의 여성대통령 만들기 신화와 만나게 될 뿐이다.

2. 진보적 남성진영의 박근혜 여성대통령 만들기

새누리당의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쪽은 야당과 진보적 남성진영이었다. 대선 슬로건과 “열 자식 안 굶기려는 어머니의 마음” 등의 표현을 통해 여성대통령을 전유하려는 새누리당의 공세적 몸짓에 대해 진보적 남성진영은 생물학적 여성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분리하는 전략을 취했다. 즉 sex와 gender를 분리

18) 2012년 10월4일 중앙여성위 대선 필수 결의대회.

시키는 담론 생산에 집중한 것이다. 그들의 논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유신공주’ 박근혜가 느닷없이 ‘여성’이란 수사를 구사하며 표심을 자극한다는 비판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은 ‘출산과 보육 및 교육, 장비구니 물가에 대해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박 후보에게 여성성은 없다’고 논평했고, 문제인 캠프에서는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 여성대표가 될 수 있는지, “퇴근하는 남편의 저녁식사를 준비해 보지도 않은 여성이 평범한 여성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냐”고 반문하며 대중여성과 박근혜를 분리하려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또한 심리학자 황상민(연세대)은 “(박근혜 후보는) 생식기만 여성일 뿐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건 없다”고 못 박았다.¹⁹⁾

이처럼 진보남성들은 일반 여성의 현실적 삶을 부각시킴으로써 공주로 살아온 박근혜 후보의 한계를 폭로하고자했다. 그러나 폭로전략은 거센 역풍만을 불러일으켰다. 박후보를 대중여성과 분리시키려는 전략은 임신과 출산, 양육과 내조를 하지 않는 여성을 폄하하는 역효과를 낳았고, ‘생식기’라는 발언은 여성대중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켜 결국 민중미술가의 〈유신출산〉 그림과 함께 반여성적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진보남성들은 여성의 역할을 모성과 가사노동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여성대중과의 불편한 전선을 만들었던 것이다.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gender)의 개념적 구분은 1970년대 여성운동의 성과이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보바르의 선언과 로버트 스톨러의 『섹스와 젠더』로 인해 선명해진 젠더(gender)개념은, 여자로 태어났기에 여자다운 품성/ 행동/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생물학적 환원론이나 결정론을 극복하고자 고안되었

19) ‘채널A 박종진의 캐도난마 출연한 황상민 발언전문’ 동아일보 2012년 11월 2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21102/50587542/1>

다. 젠더이론은 여성억압의 본질적인 토대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사회변혁을 꾀하는 뚜렷한 정치적 지향점이 있었다. 그런데 대선현장에서 이른바 ‘진보적’이라는 남성지식인들은 여성의 삶을 출산, 보육, 가사노동으로 환원함으로써 젠더개념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탈각시켰다.

결국 ‘박정희의 딸’에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란 이미지를 덧입힘으로써 과거사의 족쇄를 풀어준 것은 ‘여성’ 기호를 소재로 그를 조롱했던 진보남성들이었다. 물론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위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하였겠지만, 부적절한 수사의 남용은 오히려 박근혜도 성차별적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보통여성임을 확인시켜주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보수언론이 한 몫을 담당하였다. 보수언론은 박근혜 역시 여성대중과 똑같은 사회적 약자라는 담론을 생산, 유통시킴으로써 ‘공주’와 ‘여왕’의 이미지를 약화시켰다.²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소 공허하고 낯설게 여겨졌던 여성대통령이라는 박근혜의 표상이 점점 보통여성의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마침내 박근혜는 과거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대표의 프레임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진보여성진영의 박근혜대통령 만들기

몇몇 여성인사들은 박근혜의 여성대표성 선전에 대해 “박근혜가 여성에 대해 해준 일이 뭐 있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가 2라는 사실 외에는 여성과 가장 거리가 먼 여성이다” “그녀는 여성도 국민도 대변하지 않는다. 그녀의 몸은 ‘아버지 박정희’를 매개한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20) 허진, ‘박근혜 출산 그림’ 침묵하는 진보 여성계, 중앙일보 2012년 11월 20일자; 최연진, ‘차출산 그림’ 홍성담, 이번엔 女다리사이로 박정희 나오는 그림 그려, 조선일보 2012년 11월 26일자

반면 진보여성 진영에서는 박근혜가 스타 정치인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더 나아가 여성대통령후보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동안, 그에 대해 10년 이상 무관심을 가장한 침묵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진보적 남성 학자의 “생식기만 여성”이라는 발언이나 민중미술가의 ‘유신출산’ 작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그 사이에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진전 되었다.

박근혜와 진보여성 진영의 불편한 관계의 일차적 뿌리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성장한 여성운동과 유신 시절 적극적 여성동원의 전력을 가진 박근혜의 정치 이력²¹⁾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간극에 있다. 둘은 존재 기반의 ‘다름’과 여성이라는 기호의 ‘같음’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진보여성 운동진영은 박근혜의 여성대표성 선취와 전유에 무기력한 침묵만을 견지한 것이다.

‘여성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과 ‘준비된 세습대통령’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박근혜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쟁점이 되었을 때만 해도 대다수 유권자들은 유신 시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준비된 여성대통령’ 슬로건이 등장하고, 박근혜의 ‘여성’ 기호를 둘러싸고 논의가 집중되는 동안 과거사의 족쇄는 풀렸던 것이다.

당선의 일등공신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후광이나 특유의 감성적 아우라로 퇴출직전의 부패한 보수정당을 회생시켜낸 박근혜의 전력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유권자 51.1%의 지지에는 여성대통령이 젠더불평등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착각과, 그의 낡은 이미지가 희소성이라는 여성정치

21) 박근혜가 1976년 총재로 있었던 <구국여성봉사단>은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개조운동을 벌이는 단체였고 여기서 77년부터 새마음갓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권인숙은 유신시대 학생동원의 정점에 박근혜가 있었으며, 그는 권위주의적 가부장 국가의 대리인이었다고 평가한다.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서울:청년사, 2005) 참조.

인의 이미지로 희석된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새시대 정치인’이라는 미래적 이미지를 덧입혀준 일등공신인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슬로건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말이다.²²⁾ ‘준비된’ 대통령이 급작스레 부상한 안철수나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이었다면, ‘여성’대통령은 여성 대중과의 동질화 전략이었던 셈이다.

이른바 ‘진보적’ 여성과 남성 지식인들이 박근혜 후보를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일 뿐이라고 일축한 발언은 정당했는가? 1980년대 중반 이래 페미니즘과 문화이론 등 비판이론에서는 섹스와 젠더의 구분/분리를 넘어서고자 섹슈얼리티(sexuality) 개념을 고안하였다. 섹스와 젠더의 구분이 성차(sexual difference)와 성정치의 중립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몸의 물질성을 간과하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에게 날개와 족쇄를 동시에 준 ‘박정희의 딸’이란 기표를 삭제할 수 없는 것처럼, 몸에 새겨진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인 성(gender) 역시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삭제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

IV. 박근혜정부와 여성정치세력화

박근혜의 여성대표성을 두고 벌어진 sex/gender 논쟁은 누가 옳은지 그 윤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여성정치담론의 공간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만약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남성이었다면 여성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22) 이숙진, 「한국여성 지도력의 변화와 기독교의 역할」,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3년 3월호, 10 ; 이은경,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인터뷰-“여성 대통령 나오면 여성금기도 사라진다”’, 여성신문, 2012년 12월 7일자; 김형준, ‘박근혜 정부의 다섯 가지 딜레마’, 여성신문, 2012.3 참고.

23) Moira Gatens, *A critique of the Sea: Gender distinction*, ed. Sneja Unew, *A Reader in Feminist knowledge*, Routledge, 1991

수 있을까 상상해 보자. MB정권은 참여정부가 기획한 젠더레짐이 작동되고 국가페미니즘이 정착되려는 단계에서 정권을 이어받았음에도 양성평등 정책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여성인권 최하위국의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성평등 정책의 후퇴는 MB정부가 17대 대선과정에서 여성진영에 빚진 것이 없었던 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가부장적 보수정당에 기반하고 있지만 여성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여성정책을 공약했기에 성평등적 정책 요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여성의식이 갑자기 고양되어 여성인재를 등용하고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앞서서 입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여성진영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인적 구성에서 부터 문제였다. 인수위의 경우 2명의 여성위원만이 배정되었고, 첫 내각에도 24인의 장관 중 여성은 단 2명이었다.²⁴⁾ 게다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방향이 농축된 취임사에서는 ‘국민’이 57번, ‘행복’이 20번 언급된 것에 비해 ‘여성’은 단 한차례 언급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여성진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여성현안 해결이나 양성평등에 의지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²⁵⁾ 그러자 몇 주후, 차관급에 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6명의 여성을 채용하고, 참여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했던 여성정책담당관제²⁶⁾를 부활하는 등 전문인력의 성비 조정을 시도하였다. 이는 여성진영에 의한 강력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따른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여성대통령이라는 기호를 선취/전유하는 대가로 수많은 (양)성평등 공약을 한 박근혜 정부는 집권내내 여성진영과의 창조적 갈등관계를 형성

24) 이명박 정권 초기 내각은 여성 비율 13%였고, 노무현 정부는 21%였다. 이숙진, 『여성, 날개를 달다: 참여정부 정책총서 사회정책면-여성보육』(서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2), 75.

25)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7일 인수위에서 발표된 장관인선 이후 논평.

26)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무관급 담당관이 부처별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던 제도로, 성평등 정책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할 수밖에 없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같은 정책처럼, 형식만 있고 내용은 비정규직이어서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을 수도 있으며, 실현방안이 모호한 정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특정 집단에 적대적이거나 편향적인 실체가 아니지만, 여성진영의 부단한 요구로 인해 여성친화적 정책을 쓸 수밖에 없듯이 국가도 정책도 어느 정도 합의된 압력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성 중립적이지 않다. 정책 및 국가의 이해가 기득권에 기반하지 않고, 주변화된 집단의 경험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별 감수성과 성 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별 감수성은 저절로 형성되거나 갖추어지지 않는다.

여성의 참여와 세력화는 여성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차적 수단이다. 국내외에서 여성할당제, 적극적 조치, 채용목표제 등의 제도가 나온 것은 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함이었고, 여성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비로소 그 영역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정책에는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15% 달성과 미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공직 내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²⁷⁾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보육복지정책 역시 여성정책과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의 정책철학을 이어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0-5세 보육 및 육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이다. 이 정책에 의하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연령과 기관 이용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달 국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는 유아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차등지원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공적 자원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공생의 감각을

27) 이숙진, 앞의 책, 79-83.

높이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유아교육이 보편복지의 원리에 따라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다면 보다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와 철학을 공유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완전책임제 보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육복지의 입안이 가능했을까?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복지대중의 욕망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유권자의 수는 남성에 비해 많다.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도 여성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여성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바로 이 지점에 신학이 개입해야 할 것이다.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확장된 여성정치 공간에 여성진영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가? 우선은 기존의 제도와 정책 운영에 일정정도 지분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 국가페미니즘을 기획하는 페모크라트를 지원하는 방식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²⁸⁾ 참여정부 시절 여성운동 및 엔지오 경험이 있는 여성운동가들이 정부 관료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페모크라트는 여성운동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여성 친화적 국가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와 국가에 개입하는 것은 이른바 ‘끼워들기의 전략’으로서 남성독점의 영역을 교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새판짜기의 전략’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그 자체는 정치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서 박근혜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여성의원 비율이 1~2% 정

28) 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이란 페미니즘이 국가 영역에 제도화되는 것을 뜻하며, 페모크라트(Femocrat)는 국가 관료 조직 안에서 일하는 여성주의자를 일컫는 말이다.

도에 불과하다가, 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후에는 20% 증가세였다. 만약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여성의원의 수가 격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처럼 당장에는 여성에게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사안이라면, 여성진영에서는 대안적 조치를 계발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는 여성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선심 정책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학자 낸시 하트삭은 “여성들이 진정으로 대표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치 체계에 단순히 포함될 수 없으며, 체계 그 자체가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파이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보다는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규칙을 만드는 것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올랑드 사회당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남녀동수를 내세웠고, 집권 후 실제로 34명의 남녀 장관을 동수로 구성하였다. ‘남녀동수운동’은 선출공직에 여성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여성운동가들이 주도하여 2000년 6월6일에 입법되었다. 이 법은 거의 모든 정치공직에서 전체 후보자의 절반이 여성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²⁹⁾ 정치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여성의 본성을 반영해서가 아니라 남성지배에서 기인하는 차별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 역시 여성할당제(비례대표 30%)를 넘어서 남녀동수제를 정치적 의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면, 유권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모든 공적 영역에서 특혜를 줄이고 여성정치인을 동수로 늘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

29) 이문숙,〈프랑스 사회당의 동수법(loi Parité)을 통해본 여성 정치세력화〉, 한국프랑스학회 학술발표회, 2002. 10, 148-150.

30) Scott, W. Joan, *Parite!: Sexual Equality and the Crisis of French Universalism*, 오미영의 역,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고양: 인간사랑, 2009)

이 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이해관계를 넘어 정치의 민주화, 젠더의 양성 평등, 정치적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³¹⁾

V. 여성정치세력화와 기독교 여성윤리학의 과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뽑은 이 시대에 과연 교회공동체와 신앙인들은 여성 정치공간의 확장과 세력화에 어떠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여성정책 실현에 개입할 것인가, 교회여성들에게 여성정치세력화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성 정치공간의 확장이 교회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등등의 질문에 대한 탐구는 한국기독교 여성윤리학이 당면한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이 말의 함의는 온갖 열악한 삶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여성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온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향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대통령시대로 진입했다는 요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지독한 여성혐오의 문화가 ‘일베’ 등의 각종 인터넷사이트를 거점으로 하여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취업률은 터무니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설령 취업한 경우라고 해도 성별 임금격차는 크며, 여성에게 할당된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감정노동에 쏠려있다. 여성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의 순위가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삶의 조건이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의 상태로 미루어볼 때, 최고지도자가 여성라고 해서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바로 이러한 성차별적인 부정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31) 임옥희, 「젠더불안, 민주주의, 보편성」, 여성이론연구소, 『여/성이론』27호, 2012. 겨울, 53-56.

받은 피조물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하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답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요컨대 기독교윤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하는 것으로 귀결된다.³²⁾ 주지하다시피 하나님의 뜻이란 진공상태의 언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 세상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이다. 세상과의 관계라는 의미는 공동체와의 정치사회학적 관계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윤리학자 레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정치라고 보았다. 기독교 정치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행위이자 그 행위에 관한 연구이다.³³⁾ 요컨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정치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윤리학에서 말하는 정치신학이다. 그러하기에 부정의한 상황에 직면하고도 아무런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임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주류 신앙전통은 개인의 죄와 영혼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사회구조적 악의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참된 신앙인의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있다. 서구 근대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한 정교분리담론은 구조적 악에 회피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데 오용되었다. 구조적 악에 침묵하는 행위를 비정치화로 해석하고, 오직 영혼구원에 힘쓰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로 오도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 신앙인은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침묵도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며, 우리의 일상 역시 구체적인 정치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신앙인이라면 일상의 정치적 공간을 복음의 빛, 하나님의

32) Lehmann, L. Paul.,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75-80.

33) 위의 책, 75-80, 82, 85.

뜻으로 정화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정치신학에는 구체적인 현실분석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온갖 비기독교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 방관하거나 합리화해 주는 결과를 낳는다. 신학이 정치신학일 때 비로소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된다.³⁴⁾

현대 기독교 정치윤리의 핵심은 신앙공동체의 정치적 책임이 어떻게 공적 영역에 나타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전한다는 것은 추상적 신학화 작업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이 산출하는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사회는 유권자의 절반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은 10%대 중반을 넘지 못하고, 여신도수가 70-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교회 내의 의결기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불평등한 정치문화에 적극적인 개입과 능동적인 대처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세계를 왜곡한 성차별적 정치문화와 사회체제, 신학과 교회체제에 대하여, 교회와 여성신앙인의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이 요청되는 이때 베벌리 해리슨이 제안한 ‘분노’는 매우 유용한 에너지이다. 해리슨은 지금까지의 기독교 윤리학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정의만 강조하고 성별 정의(gender justice)를 간과해온 점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해방론과 기독교 윤리의 접목을 시도한 대표적인 여성윤리학자이다.

해리슨은 여성신학의 출발점인 여성의 경험 중에서도 특히 분노의 경험을 주목한다. 교회는 오랜 역사동안 교만과 불순종을 원죄로 이해하였고, 분노를 치명적인 죄로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분노야말로 여성윤리의

34) Moltmann, Juergen., 조성로 역, 『정치신학 정치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04.

근저를 이루는 경험이라고 보았다. 분노는 사랑의 결핍이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열매이자 사랑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왜냐하면 분노는 다른 이들과 관계맺는 한 양식이자 생생한 보살핌의 한 형태이며, 변혁으로 투신하도록 이끄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분노를 표명하지않고 숨긴다면, 타자와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랑의 힘이 줄어들는다.³⁵⁾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는 공간으로 전락한 성전에서 폭발한 예수의 분노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인 정의의 윤리가 가장 잘 구현되었음을 본다. 이러한 점에서 분노의 창조적인 힘은 부정의한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변혁하고 대안적 공동체를 모색하는 기독교여성윤리학의 중요한 출발점이다.³⁶⁾

여성할당의 규모를 30%에 제한하면서도 그것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공정하게 파이를 나누는 규칙을 요구하는 작업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여성 정치세력화를 통해 관철해야 할 주된 과제는 공정한 규칙의 수립이다. 시혜적으로 베푸는 선심 정책에 안주하기보다는 불공정한 배분구조와 부정의한 공동체에 대하여서는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보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윤리의 정립과 실천이 절실히 요청된다. 박근혜정부의 여성정책에 적극 개입하여 창조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부정의에 분노하며, 끼워들기와 새판짜기의 전략을 통해 여성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작업은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하는 한국 여성신학과 여성윤리학의 관심주제와 긴밀하게 연동되어있기 때문이다.

35) Harrison, W. Beverly, *Making the connections : essays in feminist social ethics*, Carol S. Robb(ed.), Boston: Beacon Press, 1985. 8.

36) Harrison, W. Beverly, *The Power of love in the Work of Love.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vol.xxxvi, 1986. 41-57.

참고문헌

-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2005.
- 박근혜. 『새마음의 길』. 서울: 구국여성봉사단, 1979.
-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강남식, 정현백 대담-페미니즘 아젠다는 우리의 미래인가』,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 기획대담』, 2004. 5.10 미간행자료.
- 이문숙, 『프랑스 사회당의 동수법(loi Parité)을 통해본 여성 정치세력화』, 한국프랑스학회 학술발표회, 2002. 10.
- 이숙진. 『여성, 날개를 달다: 참여정부 정책총서 사회정책면-여성보육』. 서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2.
- 이숙진, 『한국여성 지도력의 변화와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사상』 2013년 3월호.
- 임옥희. 『젠더불안, 민주주의, 보편성』. 여성이론연구소. 『여/성이론』 27호, 2012, 겨울.
- 조이여울. 『여성정치, 이미지만 있다』. 『문화과학』 38호. 2003
- Scott, Joan. 오미영외 역.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고양: 인간사랑, 2009.
- Niebuhr, H. Richard. 정진홍 역. 『책임적 자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83.
- Moltmann, Juergen. 조성로 역. 『정치신학 정치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Moira Gatens, "A critique of the Sea; Gender distinction", Sneja Unew(ed.), *A Reader in Feminist knowledge*, Routledge, 1991
- Harrison, Beverly. *The Power of love in the work of love*.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vol. xxxvi, 1986.
- Harrison, Beverly., *Making the connections : essays in feminist social ethics*, Carol S. Robb(ed.), Boston: Beacon Press, 1985.
- Lehmann, Paul,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여성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월간 말, 씨네21, 한겨레21,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3/03/daily-chart-3>

논문투고일: 2013. 6. 30.

심사개시일: 2013. 7. 15.

게재확정일: 2013. 8. 12.

• 국 문 초 록 •

18대 대선 이전의 박근혜는 ‘스타 정치인’, ‘선거의 여왕’, ‘독보적인 대통령 후보’라는 타이틀을 교체해 온 노련한 정치인이다. 여성정치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정치적 기반을 넓게 구축한 그는, 여성정치를 기획하는 여성엘리트들에게는, 여성정치세력화의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늘 의문거리였다. 설령 여성에게 디딤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와 연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성엘리트 진영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의 과거사 이력 때문이다. 박근혜에게 ‘박정희의 딸’ 혹은 ‘유신의 조력자’라는 표상은 그의 정치 입문(1998)을 도운 ‘날개’였지만, 대선(2012)에 도전하는 그에게는 절대 풀릴 것 같지 않은 ‘ 족쇄 ’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족쇄에서 빠져나와 그는 ‘여성’대통령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누가 그에게 여성대표성의 날개를 달아주었는가? 라는 물음은 여성정치세력화를 추진하던 여성들이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지지여부를 두고 벌인 논쟁을 규명하는 작업과 맞닿아있다.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 이 글은 18대 박근혜정부와 진보적 여성진영이 창조적인 갈등을 통해 성평등의 사회를 추구하는데 있어, 한국기독교 여성윤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제어: 박근혜정부, 18대 대통령선거, 여성정치세력화, 기독교 여성윤리학
